

## 조선일보

### [시론] • 외환위기보다 무서운 한국의 '고령화'

메탈 카라솔루(Meral Karasulu) IMF 한국사무소 대표

▶발행일 : 2007.10.12 / 여론/독자 A39 면

쇼핑객, 상인, 행인들로 가득한 서울 번화가를 걷고 있노라면, 한국이 10년 전에 외환위기를 겪었던 국가였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1997년의 경제위기는 이제 멀어져 간 기억으로만 남아 있는 듯하다.

한국인들은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벗어난 지난 10년간의 경제운영에 대해 꽤나 만족하고 있다. 연간 경제성장률은 평균 6%에 가까웠고,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8000달러 수준에 이르렀으니 그럴 만도 하다. 또한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자리잡고 있는 모습이다.

그 결과, 많은 한국인들은 이제 경제위기를 극복했기에 더 이상 구조개혁을 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갖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지금 한국경제는 10년 전의 외환위기는 극복했지만, 새로운 차원의 도전을 다시 한 번 맞고 있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국민들이 늙어가는 고령화(高齡化)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주말에 서울 탐골공원에 산책을 가 본 사람이라면, 오는 2026년에 한국인 5명 중 1명은 지금 탐골공원에서 잡담을 나누는 노인들과 같은 65세 이상이 차지한다는 게 어떤 뜻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는 두 가지 충격을 한국 경제에 던져줄 것이다. 첫째, 갈수록 일할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한국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에 부딪친다는 것이다. 둘째, 공적연금을 받는 노령층이 늘면서, 국민 전체가 부담할 정부지출과 국가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가? 갈수록 한국 내 노동력이 감소하는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기업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 하고, 서비스 산업 규제완화나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통해 노동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성장을 계속해 가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장기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고령인구의 연금수요 등을 만족시키기 위한 정부재정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재정개혁의 궁극적인 선택은 국민들의 몫이다. 큰 정부와 작은 정부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글로벌 경제시대에 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예컨대, 급증하는 정부지출에 대처하기 위해 세금을 늘릴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의 세율은 선진국들에 비해서 낮은 편은 아니지만, 세수(稅收)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낮다. 세금을 제대로 내는 근로소득자들보다는 이런저런 명목으로 세금을 정확히 내지 않는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데다, 납세자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각종 소득공제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각종 소득공제 등을 줄여가고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포착을 확대한다면, 세율을 높이지 않고도 세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정책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셈이다. 이 밖에 '덜 받고 더 내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연금개혁을 추진해 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사실 고령화가 가져올 문제의 심각성은 당장이 아니라 향후 수 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즉각 대처하지 않고 불거질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증세나 정부 지출의 축소를 겪는 고통을 겪어야 하고,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까지 훼손될 것이다. 한국이 내딛을 첫걸음은 지금 어떤 위기를 앞두고 있는지 똑바로 직시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 칼럼 작성에는 제럴드 시프 IMF 아태 부국장도 참여했다고 IMF 측은 밝혔습니다)

메랄 카라술루(Meral Karasulu)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